李 당선인-광역자치단체장 첫 간담회

‘실질적 자치권 확대’ 등 건의

‘자주재정 확충’ 등 12개 과제도
“지자체 공단 설립 규제 풀겠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동에서 공통적으로 건의한 내용은 크게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상생협력 강화’ 등 3대 분야의 12개 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이 당선인에게 건의한 내용은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필연적 요소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 자치권 확대해야=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6개 과제 가운데 첫번째로 ‘분권형 헌법 개정’을 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헌법 조항 가운데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등 규정은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 선언’과 ‘국가 · 지방간 사무 배부원칙과 기준 설정’, ‘법률 범위안에서의 조례 제정’, ‘입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제도 도입’ 등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또 법령 범위안에서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벌칙 부여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보완하고, 조례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의 조례입법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을 분담해 시·도지사-시·도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본부-시·군·구청장-시·군·구 자치경찰대-파출소 체계의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시·도 부단체장화’,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9개 부처의 65개 지방청, 194개 사무소·출장소의 시·도 이관 등도 건의했다.

◇자주 재정 확충·상생협력 강화도 필요=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현재 세입 기준으로 80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0대 30, 장기적으로는 60대 40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법정교부세율을 현재 19.24%에서 2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과세권과 조세수익권을 개선해 지방정부가 세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정외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주과세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당선인 답변= 이 당선인은 광역자치단체의 개별 건의사항과 공통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키로 한뒤 “규제 문제는 이번 정권과 관련된 큰 아젠다 중 하나”라며 “앞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열어, 한번 논의된 사항은 그 다음 회의에서 해결되고 넘어가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1~2년이 지나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규제를 풀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지자체가 공단을 설립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건의에 대해 “공단을 하든 뭘 하든 3~4년씩 걸린다는 문제가 나와 있다”며 “실제 계획을 세운 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준영 지사 별도 면담 무슨 얘기 오갔나

“운하 민자계획은 건의 들은 수준”
“낙후 지역 우선적 배려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영산강운하 건설과 관련, “(국자 재정지원으로 하는)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를 만나 박 지사의 “정부 재정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민자로 하겠다고 해서”라는 말에 대해 “계획은 살아 있다. 그 계획 바뀐 건 아니다. 민자로 하자는 게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자는 것이다”고 답했다.

박 지사가 또 “민자로 하는 부분과 재정으로 할 때는 (공사 규모가) 다르다. 하구언 통로는 6m 통로인데 배가 다니려면 30~60m로 해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 당선인은 “그것은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영산강 운하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그 동안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영산강) ‘뱃길 복원’인데 우리가 할 때는 조용했는데 갑자기 반대한다고 해서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남도 부지사가 (환경단체 측에)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또 “이 당선인을 만나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와함께 “농어촌 교육 문제와 해양·농촌 분야의 규제 완화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드렸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했고 어족자원 보호구역이나 해상 국립공원에서 규제가 너무 심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 당선인은 박 지사의 건의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이 당선인은 “박 지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자 박 지사는 “당선을 축하하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이게 다 국정이지. 따지고 보면 시도가 다 잘되면 대한민국 잘되는 거지”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박 지사와 면담 이후 곧바로 김완주 전북지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당선자는 당선 이후 그동안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의 일부 지자체장들과 만난 적이 있으나 호남 지자체장과의 개별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정몽준 의원 등 특사단이 22일 워싱턴D.C 리츠칼튼 호텔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 국무부 관리들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정 특사단장, 힐 차관보, 한승주 전 외무장관, 김우상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 /연합뉴스

李 당선인 부시에 ‘한미동맹 강화’ 친서 전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 당선인의 ‘4강 외교’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21일(현지시각)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기자들에게 “한미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미국 측에 전할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할 친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미국 측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며 “한반도 핵문제라든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李 당선인, 공직사회에 또 ‘경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사회를 향해 고강도 메시지를 던졌다.

이 당선인은 22일 ‘대한강국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간에 대한 도우미로서의 ‘공복’의 의미를 재삼 강조하면서 자기희생을 자각하는 사고방식의 일대 전환을 주문했다.

이 당선인이 지난주 대불공단 ‘전봇대’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공직사회의 무책임한 ‘책임소재 핑퐁 관행’에 일침을 가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직사회의 ‘영혼’ 문제까지 직접 거론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공직사회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재계 CEO 등 각계의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잘해달라는 말은 않겠다. 우리가 잘하겠다는 말만 드리겠다”고 언급, 그동안 민(民)에 군림하다시피한 관(官) 사이의 ‘갑을 관계’가 확실하게 자리바꿈을 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당선인은 당선 뒤 한달간 새 정부 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관과 민의 관계에 대한 ‘체험적 고백’으로 운을 뗐다. 그는 “한달간 국정을 샅샅이 살피면서 이렇게 막힌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한국이) 여기까지 왔느냐, 참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사방이 막혔는데 용케 여기까지 왔다”고 표현했다.

작심한 듯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벌어진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경고와 질타도 뒤따랐다.

그는 “공직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다”며 “어느 부서는 산하기업인들을 동원해 인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부서가 없어지는 것(이 안되도록) 좀 로비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예전에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지만 그건 다 옛날 방식이다. 어느 기업이 누구를 찾아오는 것은 통하지도 않지만 굉장히 낡은 수법”이라며 공직자의 열린 마음과 자기희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경숙 위원장 “한전 민영화 국가 장기과제”

최인기 의원 질의에 답변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구조조정 등에 대한 로드맵 발표 시기가 다음달 초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됐다.

특히,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한전 등 국가 에너지원 공급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가의 장기 과제’라는 입장을 밝혀, 한전 및 자회사의 오는 2012년 혁신도시 입주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지난 21일 한전 등의 민영화와 관련,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전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원 공급 공공기관의 민영화 계획은 전문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한전의 민영화는 국가의 장기연구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